

2010 승진형법기출문제 경위 [윤황채교수]1

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 ②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 ③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①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형법 제335조,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특수강도강간등)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법 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법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적 상실을 전후하여 북한을 방문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과 국적 상실 후의 모든 방문행위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한다.

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①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범죄 후 여러 차례 범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 ③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신법과 구법 중 경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 ② 인질치사상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
- ③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④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5.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가로 15cm, 세로 16cm, 길이 153cm, 무게 7kg의 각이 진 목재로 길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외상성뇌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 ②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 ③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배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
- ④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하였다.

6.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②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 ③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乙에게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다.

7.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
-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 행위
- ③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끝나 쟁의행위에 이른 경우
- ④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경우

8.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폭발물사용죄는 형법상 과실범처벌규정이 있다.
- ②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③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 ④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처벌한다.

9. 형법 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③ 결과가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④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초등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꽃양귀비를 교과서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경우
- ㉡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채광작업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 ㉢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 내에 유류를 저장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부대 내에 유류를 저장한 경우
- ㉣ 이복동생의 이름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나온 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귀대하지 않은 경우
- ㉤ 경찰관이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 ㉥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1. 형의 종류가 중한 것부터 경한 것으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 ①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벌금-자격정지-구류-몰수-과료
- ②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몰수-과료
- ③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벌금-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
- ④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12. 다음은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 정당성 ㉡ 상당성 ㉢ 긴급성 ㉣ 보충성
- ② ㉠ 적법성 ㉡ 비례성 ㉢ 필요성 ㉣ 긴급성
- ③ ㉠ 정당성 ㉡ 상당성 ㉢ 긴급성 ㉣ 필요성
- ④ ㉠ 적법성 ㉡ 비례성 ㉢ 필요성 ㉣ 보충성

13.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②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배임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 ③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고 그 법익침해도 절도범행보다 작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 ④ 절취한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1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간접정범에 해당된다.
-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 질 수가 없기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 ③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행하여질 수 없다.
- ④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①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 ②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나는 정도만으로는 강도음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③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범의 성립은 부정된다.
- ④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나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

16.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 공동정범과 교사범·중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중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 ㉢ 세관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다든 사실만으로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된다든가 또는 그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 ㉤ 중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 ㉥ 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안에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7.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 ③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증서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고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한 그 증서는 형법상의 재물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 ④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8.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 강도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가 준용된다.
- ㉡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사기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피기망자와 피해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범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을 면제할 수 없다.
- ㉣ 특수절도죄를 범한 범인 중 1인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의 면제를 받게 되면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도 형의 면제를 받게 된다.
-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 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자기 범행 부분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 A의 자취방에서 A와 함께 술 마시던 甲은 새벽 0시30분경 사소한 말다툼으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죽은 A의 곁에서 몇 시간 잠을 자다가, 같은 날 아침에 A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A의 점퍼 주머니 속에 A의 예금통장과 인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는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와 근처 은행에 가서 A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A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다음 중 甲의 형사 책임은 무엇인가?(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② 살인죄,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 ③ 살인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④ 살인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20. 甲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만화천국’이라는 만화가게에서 가게 주인인 乙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乙이 계산대 뒤의 창문에 두고 간 핸드백에서 乙 소유의 엘지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그 곳에서 약 50m 떨어진 신한은행 종로5가 출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다시 위 가게로 돌아와서 乙의 핸드백 안에 신용카드를 넣어 두었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 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폐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한다.

2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 조상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으로 평가된다.

- ㉡ 피고인과 고소인의 연령이 각 16세, 32세인 점 및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취침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게 되었다면,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공무원이 그 지휘, 감독을 받은 공사수급인으로부터 금 3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 금액을 받은 것이 지휘, 감독 여부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견제 또는 방해를 받을 처지에서 수급인이 교부한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한다.
- ㉣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실을 보도하고 관련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 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공갈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다음 중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소ффол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소ффол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 ㉡ 시세 조종된 주식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대출받을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경우
- ㉢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용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
- ㉣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인 경우
- ㉤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3. 다음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중중의 회장으로 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중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다음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중중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계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 ③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횡령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4. 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 ㉡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 ㉢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행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 ㉣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다음 중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계란 30여 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한 경우
- ②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경우

- ③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를 손괴한 경우
- ④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오스 중 약1.5m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 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경우

2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甲男과 乙女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어 甲이 영아를 살해한 경우 甲은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친구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 약 5cm, 세로 약 3cm 정도 깎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출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④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27.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누출사고'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①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주의의무를 대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야기하였다면 과실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 ② 결과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③ 예인선단과 대형 유조선의 충돌로 초래된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누출사고'에서, 예인선단 선원들의 충돌방지를 위한 주의의무위반과 대형 유조선 선원들의 충돌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 ④ 총 길이 338m, 갑판 높이 28.9m, 총 톤수 146,848톤, 유류탱크 13개, 평형수탱크 4개인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경우는 형법 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된다.

28. 다음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기존의 비실명예금을 합의차명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의 실명으로 전환한 행위는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③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수급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의 운영 업무는 비록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는 해당하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9.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행사할 목적으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 ㉡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한 채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
- ㉢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0.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원고대리인 신문시에 한 증언을 피고대리인과 재판장 신문시에 최소 시정한 경우 앞의 증언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적법하다.
- ㉡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 위증죄에는 친족간의 특례는 없으나 자수, 자백의 특례가 인정된다.
-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위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1. 다음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③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 ④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妻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32. 다음 중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토지대장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 ㉢ 시민증 ㉣ 사업자등록증 ㉤ 공증사무원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3. 다음은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 ㉡ 여기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은 포함되지 않지만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된다.
- ㉤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구별되지 않는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4.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 ㉠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또는 사회상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가 성립한다.
- ㉢ 영리등을 위한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기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 ㉤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다.
- ㉥ 주거침입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5.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일본국의 500엔짜리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무게를 약간 줄였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 ③ 형법 제207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

36. 다음 중 옳은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 ②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까지 할 필요는 없다.
- ③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나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④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37. 범인은닉(도피)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중범이 성립한다.
- ② 범인은닉죄의 객체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다.
- ③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8. 간통죄의 중용과 유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간통에 대한 중용·유서가 있는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할 뿐이다.
- ②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

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이다.

③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자와 사이에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중한 경우에는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

39. 공무집행에 관한 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40. 판례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 전대공무원 甲이 외제담배를 긴급압수한 후 도주한 범칙자를 찾는 데 급급하여 미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 세무공무원 甲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추징조치만 취하였을 뿐, 권한 있는 자에게 그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 건의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 ㉢ 경찰관 甲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 ㉣ 예비군 중대장 甲은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지만,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한 경우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윤 형 재

- 약 력
- 현 서울 국가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부산 JBS 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부산 고려고시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마산 중앙고시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울산 남부고시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인천 국가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경남대학교 형법특강강사
 - 현 전국 경찰형법모의고사 대표출제위원
 - 전 대구 국민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전 부산 한겨레고시학원 형법강의
 - 전 서울 노량진 김재규 경찰학원 강의
 - 전 서울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강의
 - 전 대구 한교고시 학원 법원검찰 강의
 - 전 서울 종로 한교고시학원 강의
 - 전 부산 금자탐경찰고시학원 강의
 - 전 영남이공대 경찰경호학과 강의

2010년 경찰관 정기 승진시험 모범답안

계 급	윤! 경위	과 목	윤! 형법	
1	2	3	4	5
①	④	③	③	③
6	7	8	9	10
④	③	①	①	①
11	12	13	14	15
④	①	④	④	④
16	17	18	19	20
④	②	③	②	④
21	22	23	24	25
③	②	②	④	①
26	27	28	29	30
④	④	①	③	②
31	32	33	34	35
③	③	③	②	④
36	37	38	39	40
①	①	③	③	②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웅 2010. 제4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6판]
3. 형법, 형소법용어해설집[도서출판 원라인 2010. 초판]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8. 개정판]
5. 형법조문과 판례[도서출판 예웅 2010. 초판]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도서출판 배움 2010. 제2판]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3판]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10. 제3판]
9. 법1 검2 경3 형법판례매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10. 개정판]
10. 경찰형법기출문제집[도서출판 원라인 2010. 초판]

☞ 카페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gosicore@naver.com